

Korea Development Institute for Self-Sufficiency and Welfare

# KDISSW 자활정책 Brief

발행 2021년 11월 발행처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13 삼창빌딩 5층

## 위드 코로나시대, 광역자활사업의 패러다임의 전환

이현수 전국광역자활센터 협의회 정책위원

- 자활정책 이슈 brief는 자활분야의 정책제안이나 정책아이디어를 시의성 있게 제시하여 정책의 방향설정과 실현에 도움을 주고자 작성된 자료입니다.
- 본 자활정책 이슈 brief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의 자활세션 주제로 ‘더 나은 일자리와 소득 증진, 삶으로의 진입을 위한 자활사업 경로 찾기’ 위해서 민·관·산 협업을 통한 자활사업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모색할 수 있는 소중한 자리를 마련하신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유만희 이사장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먼저 앞서 발표한 이상아·고은새 연구원의 ‘자활사업의 성과와 제도적 기능’ 내용 중 “현재 자활사업의 정책 목표인 참여자의 노동능력 향상을 통한 사회통합목표와 복지의존 감소를 위한 탈수급 목표,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취업 우선목표가 혼재 되어 있으므로, 최근 패러다임의 전환 속에 자활사업의 목적과 기능이 재 논의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최근 새롭게 유입되는 게이트웨이 참여주민과 청년층의 인·적성 능력을 고려한 ‘다양한 사업아이템개발과 시간제 자활근로사업 등을 반영할 수 있는 워라벨(일과 생활의 균형)을 실천할 수 있는 일하기 좋은 근로환경조성과 적절한 보상체계(인센티브)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서비스 최저기준선과 리뉴얼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둘째, 게이트웨이 과정에서 ‘사회서비스형사업과 시장진형사업의 차별화’를 통해 ‘적극적인 창업지원 정책과 개인 및 팀 프로젝트에 의한 성과급제를 강화하여 시장진입의 장벽을 해소하고 출발선 상에서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셋째, 자활사례관리의 목표를 '참여주민의 욕구문제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류'함으로써 앞서 자활사업의 목적과 목표, 기능 혼재를 줄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자활사업 중심의 목표 보다는 '사람중심의 맞춤형 자활서비스'로 분류하여 기본적으로 자활참여 주민의 '삶과 일을 병행함'으로써 개인의 삶과 행복을 향유할 수 있는 종합지원시스템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1차적으로 근로능력이 미약한 주민들의 경우 '근로유지 및 경제활동 참여를 통한 일상생활 유지와 자존감 향상'을 목표로 보호된 영역의 사회적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형사업참여와 정서적·사회적 자활지원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하고, 2차적으로 적극적인 경제활동의지가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시장진입과 창업 준비를 위한 (가칭)자활창업사관학교 형태의 전문적인 스타트업지원 프로그램개발이 시급하며, 향후 2가지 유형의 사례관리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넷째, 앞서 자활사업의 목적과 목표가 재설정될 경우, '자활센터 평가지표는 기존의 사업의 경제적 성과중심에서 벗어나, 자활주민들의 정서적 자활과 사회적 자활·경제적 자활을 동시에 평가할 수 있는 균형있는 평가지표를 개발'함으로써 '사람과 사업의 변화와 성과를 측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실천현장 본연의 책무인 휴먼서비스와 일자리를 통한 사회적 경제 가치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백학영 교수님의 '자활사업 변화와 주요쟁점' 내용 중 자활사업수행체계의 내실화를 위하여 '한국자활복지개발원과 광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의 역할관계,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재정립 등이 필요하고, 자활사업의 사회적 가치와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자활사업의 사회적 가치창출과 자활기금 운영 및 자활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한 신표준화사업 등의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하다'는 의견에 적극 동의합니다.

무엇보다 자활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 및 사업기획 단계에서 기존 탑다운 방식이 아닌 정책 및 사업기획 단계부터 서비스 공급주체인 자활현장의 상호교류와 버팀업 방식의 의사결정구조를 통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자활사업의 주체는 '공공기관과 전문민간단체, 자활사업 당사자인 지역주민들'로 구성되는데 '자활주민들의 역량강화와 지역화 실천을 위한 협력을 통하여 더 나은 일자리와 소득, 더불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지역공동체를 지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더불어 자활사업수행체계의 역할재정립을 위해서는 정책목표 수행을 위한 조직간 체계적인 직무분석과 경계선 설정을 통한 명확한 업무분담, 인재양성과 인적자원의 선순환 구조를 통한 노하우와 정보공유, 협업을 통한 공동과업 설정과 민관협력을 통한 파트너 십이 필요합니다.

최근 코로나이후 패러다임의 전환에 따라서 ‘정책 및 사업 기획이 광역단위 현장에서 실현 될 수 있도록 광역자활센터가 직접사업 수행주체가 되어 중간지원기관으로서의 명확한 역할 부여’를 위하여 한국자활복지개발원과 다양한 논의가 진행 중인데, 그중 2022년 중앙자산키움사업계획에 대한 사업대상과 운영방법, 추진 절차, 성공전략 등 구체적인 방안을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안하고자 합니다.

## 중앙자산키움펀드 & 지자체 자활기금활용을 통한 ‘자활·자활기업New Deal프로젝트’ (예시)

1. 목적: - 자활기금의 선순환을 통한 자활사업 프로그램 전문성 강화와 새로운 아이템 발굴  
- 자활현장의 지역편차 해소와 서비스 상향평준화, 사업의 효과성 증진의 계기마련  
- 자활기업 지역생태계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창업보육 및 성장지원시스템 구축  
- 전국단위 기획사업 및 신사업모델 발굴, 정보공유와 자활사업 성과도출, 우수사례전파  
- 통합적 정책 전달체계로서의 광역자활센터 역할기능 강화 및 전문적 지원시스템 구축
2. 주관: 한국자활복지개발원, 16개 광역자활센터
3. 대상: 2020년 기준 전국 250개 지역자활센터 2,471개 사업단, 1,170개 자활기업  
(자활사업단 종류- 사회서비스형사업단 1,570개, 시장진입형사업단 762개, 청년자립도전사업단 75개, 파일럿사업단 64개)
4. 내용: 지역특화지원 사업(2,000-3,000만원), 자활프로그램지원 사업(500-1,000만원)  
긴급 경영지원 사업(500만원 미만), 기능보강지원 사업(500만원-1,000만원 미만) 등
5. 예산: - 16개 광역자활 48억원(1개 센터/ 3억원), 자활기금 매칭- 중앙(70%): 지자체(30%)  
- 해당 전담직원 배치 및 운영관리비(1개 센터 5,000만원 / 약17%)
6. 절차: **(개발원)** 기본계획& 예산, 홍보지원, 모니터링, 성과공유대회(사업평가, 표창, 정보공유)



**(광역자활)** 기초수요조사→ 전문가 멘토그룹, 협력기관 구성→ 사전설명회 및 홍보→ 모집 및 서류심사  
→ 현장실사 및 최종선정→ 사업협약 및 멘토그룹 연계→ 오리엔테이션& 실무자 워크숍→ 사업추진  
→ 현장 모니터링(에로점 파악)→ 멘토지원 & 서포터즈 활동→ 현장실무자 네트워크회의→ 중간 성과공유  
→ 각종 서비스연계→ 멘토 그룹 및 서포터즈, 협력기관 회의→ 사업종결→ 성과공유(우수사례 발굴)  
→ 전국 성과공유대회→ 사업평가→ 차년도사업계획



**(복지부, 지자체)** 중앙자산키움펀드, 자활기금지원, 사업홍보, 공로자 표창, 인센티브제공

7. 전략: - 사전 기초수요조사, 사업설명회, 현장모니터링, 지역육구파악 및 사전 작업환경 조성  
- 멘토그룹 자문회의, 해당 기관실무자 네트워크 회의, 워크숍을 통한 정보공유  
- 외부자원 및 서비스연계, 정보공유 지식 창 개설, 멘토지원 및 서포터즈 활동 정례화  
- 성과공유대회를 통한 동기부여 및 종사자 사기진작, 언론사연계를 통한 사업홍보 강화